안철수, 거듭된 입장 변경으로 비난 자초

김수민 사건 관련 "사실 아냐" → "송구" → "중간 결과일 뿐" → 또 "송구"… '새정치'와 한참 거리 지적

김수민 의원이 연루된 불법 정치자금 수수 및 밀실 공천 의혹에 대처하는 안철수 국민의당 상임공동대표의 태도가 연일 '오락가락' 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안 대표는 의혹이 처음 불거졌을 당시 "사실이 아니라고 보고를 받았다"며 강경하게 반응했다. 이 때만 해도 많은 이들이 안 대표의 결기 어린 표정을 보고 중앙선관위의 과잉 대응이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가졌다.

그러나 안 대표는 하루 만에 "사실 여부에 상관 없이 국민께 송구하다"고 물러섰다. 전날 태도와는 크게 달라진 것을 두고 정치권에서는 안 대표가 진상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강경 대응했다가 다음날 사건을 제대로 알아보고 고개를 숙인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그는 하루 늦은 사과 표명과 함께 "당에서 사실 관계를 적극적, 객관적으로 확인하겠다"고 공언했고, 발언 직후 당에선 김수민 의혹 진상조사단을 발족했다.

안 대표는 이후 새로운 의혹이 불거질 때마다 "진상조사단에 물어보라"며 답변을 미뤄왔다.

이 과정에서 기자들은 '공천 의혹도 조사하느냐' '김 의원의 당원권 정지는 어떻게 되느냐'는 식의 질문을 쏟아냈지만 그 때마다 안 대표는 "진상조사단이 알아서 할 것"이라고 발을 뺐다.

그러나 진상조사단은 15일 이른바 '셀프 면죄부'에 지나지 않은 중간 조사 결과를 발표해 세간의 비판을 자초했다. 그러자 안 대표는 진상조사단 발표에 대해 "중간 결과 보고"라며 추후 조사가 더 깊게 진행될 것임을 시사하기도 했다.

진상조사단은 그러나 사실상 활동 중단 상태에 들어갔다. 검찰 수사 결과를 보고 결정할 문제란 것이다.

이 때문에 안 대표에게 많은 기자들이 던졌던 질문은 조사단의 활동 중단과 함께 허공으로 날아갔다. 결과적으로 안 대표의 허언이 된 셈이다.

이에 안 대표는 20일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국민 여러분께 이번 일로 걱정을 끼쳐 드린 점에 대해 다시 한 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거듭 고개를 숙였다.

불과 열흘 동안 네차례나 입장이 바뀐 것이다.

이를 두고 안 대표가 당의 최고책임자로서의 리더십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고 사안의 흐름에 따라 갈팡질팡하는 모습만 보였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나아가 잦은 말바꾸기에 이어 김수민 의원의 공천 의혹에 대해서는 당사자이자 책임자로서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고 피해가고만 있어 '안철수 답지 않다'는 비판도 나온다.

안 대표는 비례대표 공천 당시 비례대표 후보추천위로부터 추천 권한을 위임 받아 사실상 자신이 김 의원을 최종 공천했음에도, 공천 책임자로서 공천 과정을 해명하거나 직접적인 입장 표명은 하지 않았다. 진상조사단 활동을 핑계로 답변 회피에만 주력한 것이다.

일각에선 이 모든 사태가 안 대표의 잘못된 '측근 관리'로부터 비롯됐다는 시각도 있다. 의혹의 출발점이 된 선관위의 고발이 당내 헤게모니 싸움으로 인한 고발성 투서로부터 비롯됐다는 게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어서다. 당내에서도 같은 맥락에서 김수민 의혹을 두고 '터질 게 터졌다'는 분위기가 팽배하다.

안 대표의 이같은 부자연스런 행태를 놓고 세간에서는 안 대표의 트레이드 마크인 '새정치'와는 한참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안철수의 위기'가 실제적 현실로 다가오는 분위기다. /이성주 기자

세월호참사 피해구제 지원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쏟아지는 14개 질문에 김수민 침묵

불법 정치자금 수수 및 밀실 공천 의혹에 연루된 김수민 국민의당 의원이 본회의가 열린 20일 기자들이 연달아 던진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침묵으로 일관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회의장에서 본회의장으로 이동하는 사이 기자들에게 14개 가량의 질문을 받았지만 단 한번도 입을 열지 않았다. 기자들은 '검찰 출석을 연기한 이유가 무엇인가', '안철수 대표가 사과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검찰 소명 자료 준비는 어떻게 돼가나', '국회의원으로서 본인이 해명해야 하지 않는가' 등의 질문을 던졌다.

하지만 김 의원은 무표정으로 정면을 응시한 채 걸음만 재촉했다. 김 의원은 지난 15일만 해도 당 정책역량강화 워크숍에 참석해 웃으며 다른 의원들에게 농담을 던지는 등 다소 여유로운 태도를 보였다. 그러면서 그는 "공천헌금과 리베이트는 없었다는 것을 정확히 말한다"고 강변하기도 했다.

그랬던 김 의원이 이날은 그 때와 전혀 다른 분위기를 보여 관심을 끌었다. 정치권에서는 이를 두고 검찰 수사가 진행되면서 각종 의혹이 추가로 불거지는 것에 대해 김 의원이 실질적인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김 의원은 본회의를 마치고 나서는 정면 출입구가 아닌 본회의장 옆 쪽에 있는 통로를 이용해 국회를 나갔다. 본회의장 정면의 맨 앞자리인 김 의원은 중앙 통로를 따라 나오면 바로 출입구를 통해 로텐더 홀로 나올 수 있다.

그러나 그는 새누리당 의원석과 더불어민주당 의원석이 있는 반대쪽 맨 끝 통로를 이용해 나갔다. 기자들의 추가 취재가 그만큼 마음에 걸렸기에 이를 피하기 위한 우회로를 택한 것이다. /이성주 기자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

더민주 비주류 3인방, 당권도전 핑퐁게임

김부겸 이달 말까지 결정… 박영선 · 이종걸 김 의원 지켜본 뒤 결심… 주류 들러리 우려도

더불어민주당 비주류 인사들이 20일 8월 당대표 선거 출마 여부를 놓고 판세를 관망하며 핑퐁게임을 하고 있다. 당내 비주류 중 당권 주자로 꼽히는 김부겸·박영선·이종걸 의원은 물밑에서 후보단일화 논의를 하면서도 선뜻 출마 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다.

추미애·송영길 의원이 당내 최대 계파인 친노무현·친문재인계의 지지를 얻겠다며 경쟁을 벌이는 반면 비주류로 분류되는 이들 3인방은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이들 3인방은 대중적 인지도 면에서는 주류 쪽 추 의원이나 송 의원에 비해 뒤처지지 않지만 당내 친노·친문과의 관계가 원만치 않은 탓에 당 차원의 선거인 이번 당대표 선거에 나서기에는 선거구도나 당내 지형이 유리하지 않다는 자체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먼저 김 의원 쪽은 이달 말까지 당대표 선거 출마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박 의원과 이 의원은 김 의원의 출마 선언 여부를 지켜본 뒤 직접 출마할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의원 측은 고심을 거듭하고 있는 듯 이날 모 언론사와의 통화에서 입장 표명을 자제했다.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이야기다. 일각에서는 김 의원이 당권보다는 대선 쪽으로 마음을 두고 있기에 당권 출마를 주저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박 의원 측은 김 의원과 단일화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히며 출마 여부에 관해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박 의원도 비노 진영이 결속해 자신이나 김 의원을 옹립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듯 하다.

이들 보다는 상대적으로 당권 출마에 의욕을 보이는 이 의원 측도 일단은 김 의원의 결정에 따라 최종 결심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이나 이 의원 모두 김부겸 의원의 거취를 보고난 뒤 판단하겠다는 자세다.

다만 이들 3인방을 포함한 비주류 측에서는 과연 친노·친문세력이 미는 후보를 상대로 당선이 가능할까라는 점에 회의적 시각을 갖고 있다. 원내대표 선거나 국회의장 선거에서 보면 모두 주류의 후원을 받는 후보가 당선됐다.

비주류 후보들이 걱정하는 부분도 여기에 있다. 주류들이 벌여놓은 잔치에 들러리만 서지 않겠느냐는 우려를 하고 있는 것이다.

당내 비주류 쪽 한 관계자는 "비주류가 당대표 선거에 나서기 쉽지 않은 구도"라면서도 "아직 8월 말까지 시간이 있는 만큼 주류 측 움직임을 보고 후보 단일화 등을 판단할 문제"라고 밝혔다. /이성주 기자

마을만들기 사업 주민 자발적 참여 · 공동사업조직 필요

'도 마을만들기 활성화 전략' 세미나… 진안 원연장마을 · 완주 안덕마을 · 임실 치즈마을 사례 고찰

농어촌 마을의 인구 유출과 고령화로 지방소멸의 위기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도내 마을만들기 사업에 마을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소통, 마을의 공동사업조직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전북도의회 마을활성화연구회(대표의원 김현철)는 20일 전북도의회 세미나실에서 '전라북도 마을만들기 활성화 전략'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는 도내 마을만들기 사업의 실태를 파악하고 전국적으로 마을만들기 사업의 성공모델로 손꼽히고 있는 전북지역 진안 원연장마을, 완주 안덕마을, 임실 치즈마을의 사례들을 통해 각 마을들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함께 고민했다.

전북연구원의 황영모 박사는 '전라북도 마을만들기 사업의 실태와 활성화 전략'에 대한 발제를 통해 "마을만들기 정책은 기초단계→활성화단계→관리단계로 구분해 단계별 추진체계를 실행해야 하고 행정부서 간 정책을 연계하는 체계를 구축해 상시적으로 조정·통합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진안군 원연장 꽃잔디마을의 신애숙 대표는 마을주민이 총70여명에 이르는 마을에 연간 2만명이 넘는 방문객이 참석하는 마을로 만들기까지 마을사업을 고민하고 마을주민들과 소통하는 과정을 소개했다.

신 대표는 "지금의 원연장마을이 있기까지 마을주민 90% 이상이 참여하는 끊임없는 교육과 마을회의를 진행했고 주민들이 사업을 이해하고 스스로 참여하는 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강조했다.

완주군 안덕마을의 유영배 대표는 2009년부터 시작한 한증막 외에 아무것도 없던 안덕마을에 주민들이 직접 숙박장을 짓기 시작하면서 '주민 주도형 마을사업'을 이끌어 온 사례를 소개했다.

임실군 치즈마을의 권봉관 총무팀장은 2003년 당시 녹색농촌체험마을 사업에 선정되어 마을사업을 시작하면서 농촌관광을 기본으로 한 마을사업의 성과에 대해 발표했다.

김현철 대표의원은 "도는 지난 2001년부터 총 16개 사업에 6,458억원을 통입해서 총 670개 마을사업을 지원해왔다. 그러나 10개 마을 중 3개 마을만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며 "우수 사례로 소문난 마을들을 통해 행정주도의 마을만들기 사업이 아니라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소통하는 마을사업이 곧 성공의 열쇠였음이 드러난 만큼 앞으로 도내 마을사업이 주민역량을 강화하는데 정책적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광영 기자

도의회, '영유아 전자파 보호 건의안' 채택

전북도의회가 제333회 정례회에서 '영유아 전자파 보호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채택, 정부에 대책을 촉구한다.

20일 전북도의회 박재완 의원(완주 2)에 따르면 국내 무선기지국은 해마다 증가해 현재 약 6천만 개에 달한다.

우리나라 세대수가 약 2천만(20,724,094)이고, 읍·면·동의 수가 3,496개('15년 기준)라고 볼 때 세대 당 2개소, 동네마다 1만7천여 개소의 무선기지국이 설치된 셈이다.

무선통신을 이용한 각종 전자·전기제품들이 나올수록 국민들은 전자파에 더 많이 노출되고 있는 것.

특히 영유아, 어린이, 노인 등 '전자파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대책은 시급하다.

현행 '전파법'(미래창조과학부)에서 정한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은 성인남자기준으로만 되어 있어 어린이, 환자,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일반인에 비해 면역력이 약하거나 전자파로부터 더욱 보호받아야 할 대상까지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박재만 의원은 "전자파의 인체 유해성에 대해서는 현재 세계보건기구(WHO)를 비롯해 국내·외에서 활발하게 연구하는 중이어서 현재까지 뚜렷하게 밝혀진 바가 없다"면서 "그러나 많은 국가에서 '사전주의 원칙'에 따라 예방적 차원에서 전자파 취약계층에 대해 엄격한 기준을 별도로 설정해 제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행법상 자치단체는 무선기지국의 설치신고·허가권을 비롯한 어떠한 권한도 가지고 있지 않아 법 개정 등 정부차원의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며 "정부가 전파법 개정을 통해 영유아 전자파 보호기준을 신설하고 어린이집·유치원·놀이터 등을 전자파 취약지구로 설정·관리하는 등 조속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2016년 5월말 기준 도내 어린이집은 1,577개소 원생 수는 4만9,057명이며, 도내 유치원은 522개소, 원생 수는 2만6,406명에 이른다. 중앙전파관리소에서 집계한 전북지역 전체 무선기지국수는 총 4만7,392국이다.

/신광영 기자

野 박승춘 해임촉구결의안 3번째 발의

야3당이 20일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에 대한 해임촉구결의안을 발의키로 하면서 이번에는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식으로 박 처장에 대한 해임촉구결의안이 발의되면 이번이 3번째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에서 "어제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이 또 사고를 쳤다"면서 "야3당은 이번 주 중으로 박 처장의 해임촉구 결의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 역시 이날 최고위에서 "야3당은 (박 처장에 대한) 해임촉구결의안을 제출토록 합의했다"고 밝혔다.

국가보훈처는 올해 6·25 기념행사에서 옛 전남도청 앞에서 제11공수특전여단이 참여하는 시가행진을 계획했다가 논란을 일으켰다. 제11공수특전여단은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으로 투입됐던 부대다.

앞서 야당은 5·18 공식기념식을 앞둔 지난 5월 박 처장이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거부 결정을 내리자 20대 국회 개원과 함께 박 처장에 대한 해임촉구결의안을 제출키로 의견을 모은 바 있다. /이성주 기자

국회 법사위, 여야 간사 선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0일 20대 국회 첫 전체회의를 열고 여야 간사를 선임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여야 간사의 건을 의결했다.

여당 간사에는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이, 야당 간사에는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이 각각 선임됐다.

김 의원은 "여야 간 싸우는 것이 아닌, 일하는 법사위가 돼서 좋은 법이 많이 통과됐으면 좋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박 의원은 "싸우지 않을 순 없지만 그냥 싸움이 아니라 국가, 민주주의를 두고 싸우겠다"고 다짐했다.

이 의원은 "앞으로 싸울 일이 많을 것"이라며 "합리적으로 싸우는 법사위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성주 기자

정진석 "능력 안되는 재벌 2세 경영참여 감시해야"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20일 "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재벌 2, 3세들이 편법 상속, 불법적 경영권 세습을 통해 경영에 참여하는 것을 감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같이 말한 뒤 "독과점 규제 등 가용 수단을 동원 방만한 가족경영 풍토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원내대표는 우선 롯데그룹의 경영권 분쟁과 관련, "구십을 넘긴 아버지와 두 아들이 그룹 경영권을 놓고 한국과 일본을 오가며 싸우고 있다. 국민 모두가 눈살을 찌푸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우리나라 대기업은 총수 일가가 서로 기업을 나누어 가지고, 경영권을 행사하다보니 일감 몰아주기 등의 불공정한 관행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탈법, 편법적인 부의 세습, 일감 몰아주기를 통한 불법적 부의 증식, 무분별한 사업확장으로 인한 골목 상권 침해는 반드시 규제돼야 할 대기업의 비정상적 행태"라고 덧붙였다. /이성주 기자